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광고](#)

성명·보도

[취재요청] 200701_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설명회

작성일 2020.07.01 작성자 대변인실 Views 2206

취재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년 7월 1일(월)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10-9401-1370)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정우준(02-469-397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안 발표 및 설명회

- 일시 : 2020년 7월2일(목) 오후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취지

민주노동과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지난 5월27일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6월30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21대 국회 입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추진했던 20대 국회 2017년 노회찬 의원 입법발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변화가 있었고,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와 스틸라이지호 참사에서 제기된 여러 실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한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을 발표하고 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회에는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각각의 사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구의역 참사 4주기, 고 김용균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 명명하며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의 사망감소와 K방역의 우수성을 호기롭게 외치고 있지만 4월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시민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20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부족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기업주는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노동자·산재, 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운동본부를 이뤘습니다. 우리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를 맞아 시민·노동자, 산재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안으로 모두의 힘을 합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주요 프로그램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 발언 1 “힘 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합니다.”

(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박철희)

- 발언 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발전비정규노동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 발언 3 “기업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 임선재 지회장)

- 발언 4 “숨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

- 발언 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허경주)

- 발언 6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유정근)

- 발언 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설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 손익찬 변호사)

- 중대재해기업처벌 주요 문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최명선)

□ 질의응답

<끝>

List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